

## 서울특별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

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더욱이 2025년 통계 기준,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33%는 통학을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왕복시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폐교재산 활용 등을 통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 노력은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상혁 위원장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

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支持)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성 기자

## 윤재상 의원, 인천시 농수산물식품국 신설 이끌어



인천광역시농·축산·수산 행정의 공백 해소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식품국’을 신설한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대 초부터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농축산 관련 조직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인천시 ‘농수산물식품국’을 신설에 앞장

서 왔다. 윤재상 의원은 “과거 인천이 경기도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농정국이 있어 지역 농축산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면서 “이후 농정국 폐지로 조직

기능이 대폭 축소돼 현재는 농축산유통과만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꾸준히 알리고, 농정국 부활을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농수산물식품국 신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농수산물식품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지역 농업·축산·수산업의 통합 지원과 체계적 육성,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농축산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윤재상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정활동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농수산물식품국이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역 농축산업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현 상황과 나아갈 길’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이의 생애 첫 출발을 책임지는 검증된 공공 보육 모델”이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평균화 논리로 축소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영아 발달에 기반한 전문 보육을 통해 현장에서 성과를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보육 비율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운영

부담을 개별 시설에 전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책임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할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제도적·법적 지위 강화 ▲운영 안정성을 위한 예산과 조례 마련 ▲유보통합 이후에도 차별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관리·감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0세아 보육은 복지가 아닌 경기도의 미래 전략”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 보육의 기준을 지켜내고, 대한민국 영아 보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해진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공백을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해 왔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완규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나 희생으로 떠넘겨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분명한 의지를 제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경력 단절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에 책무가 명시돼 있더라도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본회의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조례가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돼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구강건강 정책 추진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 조례로, 예방 중심의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치주질환이나 치아 상실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삶의 질 전반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후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민수 기자

## 구형서 충남도의원, 불당2교 인도 설치 추진 성과



천안 불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불당2교 인도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불당2교에는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하는 등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인도 설치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형서 충남도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전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불당2교 인도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데 따라

를 성과다. 구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행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당2교는 인근 주민들의 주요 생활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왔던 만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설치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다. 이번 사업 반영으로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분리돼 시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불당2교 인도 설치에 주민들의 반복된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조원희 의장 “대전 서북부 미래를 여는 든든한 힘”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은 29일 유성 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며, 지역이 교통과 경제 관문으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이날 준공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주요내빈 축사, 시민 인터뷰 영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본 행사를 마친 뒤에는 터미널 내부 순시로 이어졌다.

조원희 의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네 차례나 무산되는 등 10여 년간 표류했지만, 민선 8기에 공영개발로 전환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관 협력이 더해져 단 3년 만에 완성됐다”면서,

“내년 1월부터 32개 노선과 도시철도, BRT, 유성IC를 잇는 뛰어난 연계성으로 충청권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터미널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대전 서북부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희(국민의힘·유성구3)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우수 조례 입법 활동으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조 의장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조 의장이 수상한 조례는 전국 유일 최초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다. 이번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광역지방의원 99명, 기초지방의원 9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재복 기자

# 덕적도 자연휴양림

**예약방법**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니들e'에서 예약

**문의** 숲니들e 통합고객센터 : ☎ 1588-3250  
덕적도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 ☎ 032-899-2860

힐링가득한 덕적도 여행!

# 덕적도 자연휴양림

웅진을 새롭게  
국민을 신나게